

여도 야도 “광주형 일자리 꼭 필요한 모델, 성공 기대”

모호한 운영 주체 등 지적...이 시장 “장기적으로 친환경차 생산”
3곳뿐인 광주 화재경제지구·환경미화원 사고 급증 대책 촉구

■ 광주시

광주시 국정감사에서는 ‘광주형 일자리’로 추진되는 현대차 합작 공장 설립과 도시철도 2호선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특히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관심 속에서 추진되는 광주형 일자리는 성공 가능성에 대한 여당의 기대와 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야당의 입장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또한 광주지역 화재 경제지구가 3곳에 불과하고,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25일 광주시청에서 4년 만에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광주시 국정감사에서는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관심이 컸다. 대다수 의원들은 업계 평균 임금보다 낮은 적정 임금을 받는 대신,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 광주형 일자리의 취지에 공감하면서 성공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광주형 일자리의 철학에는 동의하면서도 세부계획 부재와 모호한 운영 주체, 경영책임론 등을 둘러싼 논란과 지속 가능성에는 물음표가 적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경기 남양주) 의원은 “최근 노동계가 참여했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었지만 자동차 산업이 불황인데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할 수 있겠느냐. 세계적 추세는 친환경차와 자율주행차인데 광주는 어떻게 할 계획이냐”고 추궁했다.

같은 당 김병관(경기 성남분당) 의원은 “노동계가 자칫 하향 평준화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고 우려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광주 광산) 의원은 “노동계와 협의하고 대주주로 투자하는 건 광주시인데 정작 관여할 순 없다면 위험은 어떻게 감수하느냐”면서 “예정부지만 빛그린산단은 친환경차 특화산단이고 친환경 부품업체 집적이 이뤄져야 하는데 현대와 시가 합의한 신차는 친환경차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용섭 시장은 “지난 3월 발표된 노

사민정 공동결의문을 토대로 구체적인 내부안은 노동계, 현대차를 포함해 다각적으로 논의해 결정할 방침”이라며 “생산 차종도 장기적으로 친환경차로 전환하게 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유민봉(비례) 의원은 “광주형 일자리가 추구하는 구상이나 모델은 매우 긍정적이고 꼭 성공했으면 한다”면서 “현대차 투자사업이 국가 공모사업이나 시범사업이면 모르겠지만 결국 특정 기업 동자들을 위한 것이고, 주거와 보육시설 모두 지원하는 것인데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질타했다.

이밖에 공론화가 진행 중인 도시철도 2호선과 내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공공기관 채용비리, 기업투자 협약, 5·18 진상조사위 구성, 재난안전, 4부동산 문제 등 10여개 현안에 대한 구두 및 서면 질의도 이어졌다.

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 의원은 “광주 화재경제지구는 대인시장, 양동시장, 충장로5가 등 3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바른미래당 주승용(여수) 의원은 “광주에는 870여명의 환경미화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사고를 당한 건수가 49건에 달했다”면서 “지난 2015년



25일 오전 광주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광주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용섭 광주시장(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15건, 2016년 16건, 2017년 18건으로, 발생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치솟고 있는 광주지역 아파트값도 주요 이슈였다. 자유한국당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은 “광주 남구 봉선동, 광산구

수완지구 일부 아파트는 90% 급등한 곳이 있는데 왜 이렇게 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조폭 낀 수완지구 집단 폭행사건으로 실추한 경찰 공권력 회복 대책 급하다”

■ 광주지방경찰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광주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4월 발생한 ‘광주 수완지구 집단 폭행사건’ 등으로 확인된 ‘실추한 경찰 공권력’을 회복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주승용 바른미래당(여수·국회부의장) 의원은 25일 광주경찰청 9층 어등홀에서 열린 국감에서 “지난 4월 택시 승차 문제로 발생한 광주 수완지구 집단 폭행사건을 계기로 ‘손발이 묶여 있는’ 경찰 공권력을 살릴 수 있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조폭 등이 포함된 이번 사건 영상이 온라인 등에 퍼지면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초기 진압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 여론이 일기도 했다”면서 “하지만, 경찰관이 공무수행 중 민사소송에 휘말리면 개인이 직접 해결해야 하는 점, 인적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도 개인비용으로 해결해야 하는 점,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기준이 애매한 점 등 경찰에게도 억울한 면이 분명히 있다. 이는 경찰관의 공권력이 무기력해지는 이유

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광주 광산구) 의원은 “수완지구 폭행사건은 당시 인터넷과 일부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바와 달리 112신고 받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폭행사건이 마무리된 상황으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섞이면서 현장대응이 다소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역민이 매우 불안해했던 점 등을 감안해 빠른 현장 대응력과 조폭에 대한 치안력 등을 강화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자유한국당(경북 김천시) 의원은 “최근 5년간 광주에서 공무집행방해로 1448명이 입건될 정도로 공권력 실추가 심각한 상황이다. 위급시엔 테이저건 사용 등에 적극 나서도록 하는 등 현장 대응 매뉴얼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시) 의원은 “조폭 범죄 만큼은 경찰이 단호하게 대처해 시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규현 광주지방경찰청장은 “수완지구 폭행사건 이후 경찰 내부적으로 현장대응 매뉴얼이 강화되는 등 새롭게 개정됐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규모와 예산에 비해 콘텐츠 너무 빈약” 문체부 “전당장 선임 방식 변경 검토”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의 25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국정감사 현장시찰에서는 이례적으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전당시설을 둘러보는 현장시찰이었음에도 문화전당장 선임지연, 컬러 콘텐츠 부재, 문화전당-아시아문화원 이원화 등 해묵은 현안에 대한 미온적 대처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25일 안민석 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손혜원·박인숙·이동섭·이상현·정세균, 자유한국당 염동열·조경태·조훈현, 민주평화당 최경환 등 문체위원들이 문화전당 현안을 보고받았다.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광주시민에게 문화전당을 어떻게 느끼는지 물어봤더니 학점으로 치면 F학점이라고 하더라”며 “정부가 해마다 600억원 정도 운영 예산을 지원하는데 입장권 판매와 주차요금 징수로 9억원의 수입만 올린다는 건 뺨찌리 경영”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염동열 의원은 “7000억원을 들여 지었는데 치열한 운영 노력을 느껴지지

않는다”며 “연간 314만명인 방문객 중 외국인도 몇 명인지 같은 중요 요소에 대한 분석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이 정도 규모와 예산에도 별다른 콘텐츠가 없다”며 “본질은 파악하지 못한 채 예산만 달라고 하는데 문화전당이 홀로서기를 할 때도 됐다”고 꼬집었다. 손 의원은 이어 “문화전당장을 왜 이제까지 선임하지 않느냐”며 “문화전당장은 문체부, 정부와 답판할 수 있는 ‘센 분’이 선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종민 문화부 차관은 이에 대해 “5차례 공모에도 적격자를 찾지 못했다”며 “계약직에다가 임기가 정해진 공모방식으로 좋은 분을 모시기 어려워 다른 방법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당 소속인 이동섭 의원은 “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 이원화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며 “문화를 견인할 리더십을 갖춘 사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예산지원이 사실상 중단됐던 문화전당이 현 정부에서도 정상화가 지지부진하다”며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제11회 14세&세계&경제

가족들은 비록 떨어져 있어도 같이 자랄 때 같이 있어줘서 마음이 통하는 것과 같다. 그 마음의 경계선은 아버지도 알지만 어떤 선택으로 상처를 받거나 때로 힘들 때 서로를 멀게 만든다. 하지만 그 선택을 이해 해주면 공감을 해주면 그 마음의 경계선은 다시 이어진다. 나는 매일 생각한다. “왜 심하게 다투고 싸우고 해도 가족과는 멀어질 수 없는 걸까?” 가족 사이에는 어떤 경계선이 있는 걸까? 연인들은 헤어질 수 있지만 과연 가족은?

익명 / 장래의 꿈 : 의사, 학원선생, 변호사, 기타리스트

나는 묘하게 내 또래의 남자사람 친구들과 경계선을 달고 산다. 나도 그 이유를 모른다. 그래서 너무 답답하다. 나도 언젠간 경계선이 사라져 남자사람 친구들과 놀고 싶다.

김은서 / 장래의 꿈 : 스타일리스트

광주 시내 중학교에서 특별수업을 진행한 후 중2학생들(만14세)에게 주변에 있는 ‘경계선’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작고 작은 그들의 세계를 도대체 무엇이 가로막고 있을까요?
시타미치 모토유키(작가) / 2018광주비엔날레
*이 프로젝트는 광주일보와 광주비엔날레 재단이 함께합니다. 작품이 실린 신문은 광주비엔날레에서 전시 됩니다.

「광주교육청 청렴 슬로건 공모전 수상작」

The 청렴능하면 행복하게!

광주광역시교육청